

공 개



|              |                         |
|--------------|-------------------------|
| 의안번호         | 제 33 호                  |
| 의 결<br>연 월 일 | 2021. 1. 27.<br>(제 2 차) |

의  
결  
사  
항

(경기)폐퍼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        |              |
|--------|--------------|
| 제 출 자  | 위원장 은 성 수    |
| 제출 연월일 | 2021. 1. 27. |

## 1. 의결주문

(경기)폐폐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경기)폐폐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상호저축은행법」상 과징금 대상인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대상인 결격사유 있는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경기)폐폐저축은행에게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함

##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다. 제재내용 공개안 :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제33차 제재심의위원회(2020.12.18.) 심의필

<별지>

(경기)폐폐저축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12백만원) 및 과징금(140백만원) 부과

### - 과태료(12백만원) 부과

#### ○ 조치사유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3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 법적 근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43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 과징금(140백만원) 부과

#### ○ 조치사유

-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하여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30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 ○ 법적 근거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38조의2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제30조의2



## 관 계 법 규

### 1. 상호저축은행 관련 법규

####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계열관계에 있는 상호저축은행(이하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의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은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 ⑧ (생략)

**제18조의2(금지 행위)**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6. (생략)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및 가지급금 지급 금지에 관하여는 제37조에 따른다.

8. ~ 11. (생략)

② ~ ③ (생략)

**제24조(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게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5조의3에서 같다)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4.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5조의3에서 같다)의 면직 요구
5.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별표1]

상호저축은행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4조제1항 관련)

19. 제12조를 위반하여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등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8.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금지한 행위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제37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주주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며, 대주주등은 상호저축은행으로 부터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지 못한다. 다만, 대주주등에 대한 자금지원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등과 채권의 회수에 위험이 없거나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포함한다)
2. ~ 3. (생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제38조의2(과징금의 부과)**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 또는 대주주등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상호저축은행
  - 가. 상호저축은행이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제18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
  - 나. ~ 다. (생략)
2. ~ 3. (생략)

□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0조(대주주 등의 범위)** 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대주주의 직계 존속·비속

및 배우자, 대주주 배우자의 부모, 대주주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대주주 직계비속의 배우자

2.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주주가 법인등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등의 임원, 임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배우자, 임원 배우자의 부모, 임원 직계비속의 배우자

나. 해당 법인등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자

3. 임원(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직계 존속·비속 및 배우자, 임원 배우자의 부모, 임원 직계비속의 배우자

4. 상호저축은행 직원의 배우자

5.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법인등 및 그 법인등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법인등

6.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사람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등

7.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등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법인등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등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등

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주주

나. 상호저축은행의 임원

다. 상호저축은행

##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 <별표9>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표9> <신설 2014.02.11.>

#### 상호저축은행의 과징금 부과기준

##### 1. 목 적

이 기준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0조의2, 제30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통 칙

가. “자기자본”이라 함은 법 제2조 제4호의 자기자본을 말한다.

나. “과징금 부과기준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이라 한다)에서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날로 한다.

다. 과징금을 부과 받을 자(이하 “과징금부과대상자”라 한다)의 “재무건전성 및 재산상태”는 기준일의 최직근 결산일의 재무상태로 한다.

라. 과징금부과대상자의 재무건전성 및 재산상태에 대한 판단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과징금부과대상자의 별도 소명이 있는 경우 해당 소명 내역을 적용할 수 있다.

- (1) 과징금부과대상자가 상호저축은행인 경우 :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의2 <별표1>에 따라 산출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 (2) 과징금부과대상자가 상호저축은행 이외의 법인인 경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로서 공인회계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
- (3) 과징금부과 대상자가 개인인 경우 :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의해 개인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된 내역

마. 과징금부과대상자의 재무건전성 및 재산상태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소명에 대한 책임은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있고, 해당 자료 제출이나 소명이 없는 경우 이와 관련된 과징금 감경 및 면제 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감독기관의 인지’라 함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조의 종합검사, 부문 검사, 현장검사, 서면검사, 상시 감시, 및 제보, 언론 보도 등으로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이하 “감독기관”이라 한다)이 과징금부과대상자의 법 위반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 등을 파악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단, 검사와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인지시점은 검사명령의 사전통지를 한날로 간주하고 긴급한 소요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검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착수일로 간주한다.

사. “위반행위의 시점”은 법제38조의2 제1호 가목 및 제2호의 경우 한도초과여신의 상황을 의미하고 법 제38조의2 제1호 나목 및 제3호의 경우 위반여신의 상황을 의미한다.



아. “부당이득”은 법 제38조의2 각 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으로서,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 3. 과징금 산정방식

가. 과징금 부과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나.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한다.

다.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법정부과한도액에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라.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마. 그 밖에 과징금부과대상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부과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부과 과징금의 결정을 위한 요소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4.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

가. 기준금액은 법정부과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법 제38조의2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위반금액(하나의 신용공여가 여러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과징금 산정액이 가장 큰 것을 적용한다)을 말하며, 위반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위반금액의 최고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과징금이 부과된 이후 위반금액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이전의 위반금액에 추가 확인된 위반금액을 합산하여 기준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전에 부과된 과징금은 최종 산정된 과징금에서 차감한다.

다.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 법 제38조의2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서 각기 정한 부과비율(이하 “법정 최고 부과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 5. 기본과징금의 산정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단계별 기본부과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다만 영 제30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적용을

받는 위반행위의 경우, 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한 금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적용한다.

| 구 분 | 법정부과한도액          | 기본부과율   |
|-----|------------------|---------|
| 1단계 | 2억원 이하           | × 7/10  |
| 2단계 |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 7/20  |
| 3단계 |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 7/40  |
| 4단계 | 200억원 초과 2천억원 이하 | × 7/80  |
| 5단계 | 2천억원 초과          | × 7/160 |

<기본과징금 산정방식>

| 법정부과한도액             | 기본과징금   |
|---------------------|---|
| 2억원 이하              | 법정부과한도액 × 1단계 기본부과율   |
| 2억원 초과<br>20억원 이하   | 2억원 × 1단계 기본부과율 + (법정부과한도액 - 2억원) × 2단계 기본부과율   |
| 20억원 초과<br>200억원 이하 | 2억원 × 1단계 기본부과율 + 18억원 × 2단계 기본부과율 + (법정부과한도액 - 20억원) × 3단계 기본부과율   |
| 200억원 초과<br>2천억원 이하 | 2억원 × 1단계 기본부과율 + 18억원 × 2단계 기본부과율 + 180억원 × 3단계 기본부과율 + (법정부과한도액 - 200억원) × 4단계 기본부과율                      |
| 2천억원 초과             | 2억원 × 1단계 기본부과율 + 18억원 × 2단계 기본부과율 + 180억원 × 3단계 기본부과율 + 1,800억원 × 4단계 기본부과율 + (법정부과한도액 - 2천억원) × 5단계 기본부과율 |

## 6. 기본과징금의 조정

### 가. 일반원칙

- (1) 기본과징금의 조정은 기본과징금에 각 가중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을 차감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한다.
- (2)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75을 초과할 수 없다.
- (3) 조정 후 과징금은 법 제38조의2에서 정한 법정부과한도액 기타 법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가중 사유 및 비율

- (1) 위반행위의 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가중하되, 그 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text{가중금액} = \text{일평균 위반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산정한 기본과징금} \times (\text{위반일수}-1) \times 0.1\%^* \text{ 또는 } 0.2\%^{**}$$

\* 364일 이내의 위반일수에 적용

\*\* 364일을 초과하는 위반의 경우로서 364일 초과일수에 적용

- (2) 최근 3년 이내에 금융위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 1회당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을 가중하되, 그 가중액의 합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또는 다른 이득을 취하는 경우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히거나 금융시장의 신용질서가 크게 훼손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다.

####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 (1) 형식적으로는 법규위반에 해당되나 금융시장의 신용질서 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동기 및 발생원인 등을 고려할 때 법규의 본질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2) 법 제38조의2 제1호 가목, 제2호에 따른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 시정범위                       | 시정시점     | 감경기준          |
|----------------------------|----------|---------------|
| 전부시정<br>(한도초과 전액 상환)       | 감독기관 인지전 | 기본과징금의 50% 감경 |
|                            | 감독기관 인지후 | 기본과징금의 30% 감경 |
| 일부시정<br>(한도초과액의 50% 이상 상환) | 감독기관 인지전 | 기본과징금의 30% 감경 |
|                            | 감독기관 인지후 | 기본과징금의 15% 감경 |

-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4) 최근 3년 이내에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0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를 1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5) 법 제38조의2 제1호 나목에 따라 상호저축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등에 과징금이 병과 될 경우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과징금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다.
- 대주주 등이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이를 전부 시정한 경우 기본과징금의 75%를 감경할 수 있다
  - 대주주 등이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이의 50%이상을 시정한 경우 기본과징금의 50%를 감경할 수 있다
- (6) 법 제38조의2 제3호 위반에 따른 기본과징금의 경우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전부 시정한 경우 100분의 25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7) 통상의 업무 수행 중 과실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복수의 외부 변호사 자문을 거치는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100분의 10 이내에서 기본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 7.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 부과가 법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감경 사유 조정 후 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단, 법제38조의2 제3호의 과징금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 (1)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권고(유예조치포함) 또는 경영개선요구(유예조치포함) 조치를 받은 경우, 단 기준일 현재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액하지 아니 한다.
- (2) 과징금 부과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이 하락하여 경영개선권고 또는 요구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주주 등의 증자 등 자구노력이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
- (3) 기타 위 (1) 내지 (2)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과징금의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과징금부과 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법제38조의2 제3호의 과징금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 (1)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명령 또는 경영개선명령유예의 조치를 받은 경우, 단 기준일 현재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하지 아니 한다.
- (2) 과징금 부과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이 현저히 하락하여 경영개선명령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주주 등의 증자 등 자구노력이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
- (3)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변화로 과징금부과대상자의 과징금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법 제38조의2 제3호 과징금의 경우 대주주 등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 과징금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 (1) 기준일 현재 대주주 등의 재무상태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어 대주주 등이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라. 기 타

- (1) 위반행위로 인한 금융거래자 등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다.
-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벌금·과징금·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란 판결의 확정 및 과징금 및 과태료의 납부완료로 의미한다.
- (3) 단순오류, 경미한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로서 상호저축은행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매우 경미한 경우에는 견책·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 (4) 조정 후 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할 수 있다.

## 8.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납에 관한 사항

### 가. 판단기준

법 제38조의6 제1항 및 시행령 제30조의3 제2항의 과징금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 납부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자연재해, 화재 또는 도난으로 발생한 손실이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30% 이상인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과징금 부과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자본잠식이 발생한 경우
- 예금인출 사태 등 상호저축은행 정상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최근 사업연도말(반기말, 분기말) 자본잠식 상태로서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질권설정 제외)의 합계액이 과징금보다 적은 경우
- 과징금 납부 등의 사유로 상호저축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적기시정 조치가 필요한 수준으로 하락하는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4). 대주주등이 개인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프리 워크아웃) 사유에 처한 경우

#### (5). (1)~(4)에 준하는 사유로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가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담보의 징구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의무자가 과거 금융위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다.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7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 「상호저축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경영지배법인 등의 인정기준)** 시행령 제30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대주주집단에 속하는 기업
2. 상호저축은행 임원 또는 대주주 집단이 최대출자자인 기업 및 그 기업의 지배기업집단
3. 상호저축은행의 임원 또는 대주주집단 소속 개인 및 법인의 임직원이 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의 100분의 50이상 출연한 비영리법인, 조합 기타 단체 및 그 지배기업집단
4. 대주주집단 소속 개인 및 법인의 임직원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업. 다만, 객관적으로 경영이 분리되었다고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금융위가 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이 대주주집단에 해당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기업

**제13조(대주주집단)**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집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그의 특수 관계인 및 지배기업집단의 주식수 또는 지분합계가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액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집합체
2. 상호저축은행 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및 지배기업집단의 주식수 또는 지분합계가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액의 100분의 30미만이라도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합체
3. 실질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자와 그의 특수관계인 및 그의 지배기업집단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다만, 사외이사가 됨으로써 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6. 해당 금융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①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제5조 및 제6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주의적 경고
5. 주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견책
5. 주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2. 본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및 그 임원



- 다. 혼자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인(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단체와 그 임원
- 라.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다른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제8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①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 10. 30.>

1.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금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영업수익(해당 금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손익계산서 상의 영업수익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2.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회사와 매출총액(해당 금융회사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3.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본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 가.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보험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 상의 자본(해당 금융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
- 나.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 상의 자본금(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자본을 말한다)
4. 해당 금융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보험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호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정기사원총회일을 말한다) 현재 해당 금융회사가 자본금(해당 금융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5. 해당 금융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6. 해당 금융회사의 회계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다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7. 해당 금융회사와 주된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br>금액(만원) |
|--|------------------|---------------|
| 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br>제2항제1호 | 3,000         |

2. 검사 및 제재관련 법규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4조(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를 검사서에 의해 당해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7. 기관경고

가. 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되나 그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나. 위법·부당행위로서 그 동기·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1) 위법·부당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이나 경영자세에 기인한 경우
- (2) 관련점포가 다수이거나 부서 또는 점포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3) 임원이 위법·부당행위의 주된 관련자이거나 다수의 임원이 위법·부당행위에 관련된 경우
- (4) 동일유형의 민원이 집단적으로 제기되거나 금융거래자의 피해규모가 큰 경우
- (5) 금융실명법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 (6) 위법·부당행위가 수사당국에 고발 또는 통보된 사항으로서 금융기관의 중대한 내부통제 또는 감독 소홀 등에 기인한 경우

다. 최근 1년 동안 내부통제업무 소홀 등의 사유로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 (1) 당해 금융기관의 최직근 분기말 현재 자기자본(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 이하 같다)의 100분의 2 (자기자본의 100분의 2가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또는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가) 자기자본이 1조5천억원 미만인 경우 : 100억원
  - (나) 자기자본이 1조5천억원 이상 2조5천억원 미만인 경우 : 300억원
  - (다) 자기자본이 2조5천억원 이상인 경우 : 500억원
- (2) 손실(예상)금액이 (1)에 미달하더라도 내부통제가 매우 취약하여 중대한 금융사고가 빈발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크게 야기한 경우

## 9. 기관주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해임권고(해임요구, 개선(改選)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고의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금융거래자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위의 행위로 인하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0조에서 정한 적기

시정조치를 회피하는 경우

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감독과 검사업무 수행을 크게 저해한 경우

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바. 기타 금융관련법규에서 정한 해임권고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2.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가.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제1호에 따른 제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나.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 3. 문책 경고

가.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나. 당해 금융기관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다.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라.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마. 금융관련법규에 의한 감독원의 감독과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바. 금융위, 감독원장, 기타 감독권자가 행한 명령, 지시 또는 징계요구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사. 기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4. 주의적 경고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 5. 주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감독원장은 주된 행위자로서 위법·부당행위를 한 금융기관의 임원이 과거 재직하였던 금융기관에서 주된 행위자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이미 제재를 받은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④ 감독원장은 제1항제1호의 조치를 동항제2호의 조치와 함께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다. 다만,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제1항제1호의 조치와 동항제2호의 조치를 함께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금융위가 금융기관 임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정지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2.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 의한 자율처리필요사항이 과거에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등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금융기관점사및제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①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 등을 제재함에 있어서는 별표 2의 제재양정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참작한다. <개정 2010. 1. 5., 2014. 7. 23.>

1. 제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개전의 정 및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과거 제재사실의 유무 <개정 2010. 1. 5., 2015. 6. 24.>
  2.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정도, 손실액규모 및 금융질서 문란·사회적 물의야기 등 주위에 미친 영향 <개정 2010. 1. 5.>
  3. 제재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
  4. 사고금액의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변상 여부 <개정 2010. 1. 5., 2014. 7. 23.>
  5. 자진신고, 검사업무에의 협조정도 등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6. 경영방침, 경영시스템의 오류, 금융·경제여건 등 내·외적 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계
- ②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행위 등 특정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는 별표 3의 금융업 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1항 등 여타 제재기준을 참작하여 제

재를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등 제재수준을 정할 수 있다.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위자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지시자 : 위법·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 위직급자를 포함한다)
4. 감독자 :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서 정한 행위자와 감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위자 : 업무의 성질과 의사결정의 관여정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자
2. 감독자 : 당해 금융기관 직제를 기준으로 행위자에 대해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직제상 감독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위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정한 보조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행위자에 대한 제재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5.>

1. 위법·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
2. 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정도
3. 보조자의 위법·부당행위에의 관여 정도

금융업종별 · 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V-1.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의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위반 등

2. 개별차주 또는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

가. 제재대상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개별차주 또는 동일차주(이하 “개별차주등”이라 함)한도 초과취급

나. 제재기준

| 제재의 종류   | 차주별 한도초과취급액<br>비율(자기자본대비) | 한도초과취급 합계액 비율<br>(자기자본대비) |
|----------|---------------------------|---------------------------|
| 해임권고/면직  | 30% 초과                    | 50% 초과                    |
| 직무정지/정직  | 20% 초과 30% 까지             | 30% 초과 50% 까지             |
| 문책경고/감봉  | 10% 초과 20% 까지             | 20% 초과 30% 까지             |
| 주의적경고/견책 | 5% 초과 10% 까지              | 10% 초과 20% 까지             |

- 주 1) 개별차주 등 한도 초과취급 합계액비율 10%까지, 차주별 한도 초과취급액비율 5%까지는 주의조치 한다.
- 2)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임. 다만, 결산결과 결손금 발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하기 전의 금액(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 본문)

##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경기)페퍼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21. 1. 27.

3. 제재조치내용

| 제재대상 | 제재내용                      |
|------|---------------------------|
| 기관   | 과태료 12백만원 및 과징금 140백만원 부과 |
| 임원   | 주의적 경고 1명,<br>주의 1명       |
| 직원   | 주의 1명                     |

4. 제재대상사실

가.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

-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경기)페퍼저축은행은

2016.10.4.~2020.4.1. 기간 중 대주주 등에게 아래와 같이 총 1억 16백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하였음



### (1)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수수료 과다 지급

2019.9.27. 및 2020.3.31. 총 1,200억원의 우선주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투자 유치시 주간사(3개)에 대하여 증자금액의 1%를 성공보수로 각각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 ○○○○○○○○○○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없이 1%를 초과한 1.04%를 지급함에 따라 총 44백만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하였음

### (2) 대표이사에 대한 자녀학자금 등 경비 부당 지급

대표이사가 페퍼저축은행에 부임(2013.10.18.)하기 전 現대주주에 해당하는 ▲▲▲▲▲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2013년도 자녀 학자금을 2016.10.4.에 정당한 이유없이 다시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66백만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음

\* 페퍼그룹이 청구한 경비내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2013년 그룹이 대표이사에게 자녀학자금을 지급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7.1.9. 지급액을 전액 환수

### (3) 대주주 관계회사에 대한 임대료 연체이자 등 미수취

2014.11.7.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주)와 ◇◇시 ◇◇구 ◇◇동 소재 ◇◇◇◇◇ 본점 13층 일부 공간(4.7평)의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4년 10개월간 보증금,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수취하지 않다가 2019.9.30. 일괄 수취하면서,

연체이자 4백만원 및 임대료 인상분 2백만원을 별도로 청구 및 수령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총 6백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음

\* 검사기간 중 연체이자 및 임대료 인상분 등 정산 완료

#### < 관련규정 >

#### 1.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 나. 결격사유 있는 사외이사 선임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회사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상근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고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동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 (경기)폐퍼저축은행은

2017.10.27. 동 저축은행과 54백만원 규모의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한 (주)◆◆◆◆◆◆◆◆◆◆◆◆◆◆◆◆ 대표이사 ○○○을 2018.8.27. 동 저축은행의 사외이사로 재선임한 사실이 있음

#### < 관련규정 >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다.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와 8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경기)폐퍼저축은행은

2018.10.15.~2019.5.20. 기간 중 ○○○○에 대하여 동인이 운영하는 사업자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20억원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최대(2018.10.15.기준) 12억원(2017년도말 기준 자기자본 1,037억 58백만원의 1.16%)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 소관부서  | 중소금융과        | 저축은행검사국      |
| 연 락 처 | 02-2100-2993 | 02-3145-7376 |